민주, 전남 기초장 재경선 잇따라…선거판 요동

영암 전동평 군수 재심 인용…3인으로 다시 경선 치르기로
여수·강진·담양 재심 신청은 기각…지역 쪼개지고 갈등 극심

더불어민주당의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 등으로 다시 경선을 치르는 선거구가 잇따르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는 후보들의 재심 신청이 잇따르고 결정이 받아들여지는 지역과 기각된 곳이 엇갈리면서 자그마한 시골 지역 민심이 쪼개지는 등 극심한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4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동평 영암군수 예비후보가 신청한 재심을 인용, 군수 후보자 결정을 위한 경선을 다시 치르기로 했다.

앞서, 전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우승희 후보와 경선 대결에서 탈락한 뒤 '우승희 예비후보가 불공정 경선을 했다'며 재심을 신청했었다.

전 후보는 "우 예비후보가 선거구 내 권리당원에게 경선 방식을 안내하면서 거짓 응답과 이중 투표를 유도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비대위가 받아들여 재경선이 치러지게 됐다.

재경선은 기존 경선 결과를 모두 무시하고 배용태·우승희·전동평 후보 등 3인 경선으로 치러진다.

경선 방식은 오는 6일 중앙당 비대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번호선거인단 경선이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구 내 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장흥에서도 경선 불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한 후보들의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재경선이 치러졌고, 현재 2차 경선이 진행중이다.

이밖에 여수와 강진·담양의 경우 재심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5일부터 이틀 간 일정으로 경선에 들어간다.

여수에서는 당직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내 여론이 왜곡되면서 잘못된 1차 경선 결과가 나왔다며 전창곤 후보가 재심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진도 1차 경선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는가 하면, 당 기여도 등을 포함한 가·감점 적용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면서 재심이 신청됐지만 기각돼 경선이 치러진다.

담양의 경우 일부 경선 후보간 단일화로 이병노 전 담양군 자치혁신국장과 최화삼 전 담양군의회 의장 간 경선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순천(오하근·허석), 장흥(곽태수·김성), 완도(김신·신우철)에서는 4~5일 경선이 진행중이며 목포(강성휘·김종식)의 경우 오는 7일부터 이틀 간 100% 시민 여론조사 경선으로 치러진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방선거 후보자 최종 확정
국민의힘 광주시당

국민의힘은 광주시당은 6·1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광주지역 출마 후보자 추천 승인을 의결했다.

광주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총 15명으로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를 비롯한 양혜령 동구청장 후보, 강현구 남구청장 후보, 강백룡 북구청장 후보 등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비례대표 2명, 기초의원 7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2명이다.

이 가운데 청년 출마자는 총 3명으로, 박진우(93년생) 동구 가 기초의원 후보, 정현로(99년생) 남구 나 기초의원 후보, 곽승용(94년생) 북구 라 기초의원 후보 등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호중, 주한미국대사 대리 접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왼쪽에서 세번째)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 대표실에서 크리스토퍼 델코소(왼쪽에서 네번째) 주한미국대사 대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정현 국힘 후보, 본격 선거 행보 나서
전남도내 전체 읍면동 순회 '민심 탐방 1라운드' 마쳐

이정현〈사진〉 국민의힘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최근 전남도내 모든 읍·면·동을 찾는 '민심 탐방 1라운드'를 마치는 등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한 달 동안 전남 22개 시·군의 읍·면·동 순회 방문을 모두 마쳤다. 이는 그동안 '발로 뛰는, 나홀로 선거'를 해온 이 예비후보의 선거 스타일로 해석된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5일부터 18일까지 전남지역 대형 숙원 및 현안 사업 현장을 찾아 전문가 토론을 비롯한 지역 공청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 2라운드'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는 지역 현장 공청회가 끝나는 대로 12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선거기간 개시일인 19일부터 본격적인 유세에 돌입한다는 전략이다.

이 예비후보는 민심 탐방 기간 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 도민들의 고민과 관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현 예비후보는 "도민들의 여론을 청취한 만큼 이제 공청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서 "민심탐방과 공청회에서 얻은 다양한 요구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유세를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4대 지역 발전 전략을 내세우며 출마선언을 했었다. 우선 ▲전남 1인당 평균 국민소득 4만 달러로 상향 ▲전남 동서갈등 해소를 위한 서부권·동부권 발전 아이템 제시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7대 복합단지 조성 ▲순천-구례 통합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 담양군수 경선 이병노-최화삼 대결
김정오·최화삼 후보 단일화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경선을 앞두고 김정오·최화삼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들 두 후보는 4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담양군수 경선은 불·탈법과 반칙이 난무하면서 민주당과 담양의 이미지가를 후퇴시키고 있다"면서 "최 후보로 단일화해 군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들 후보의 단일화로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공천 경쟁은 이병노 전 담양군 자치혁신국장과 최화삼 전 담양군의회 의장 간 대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정오 후보는 후보를 사퇴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상했던 담양발전과 군민을 위한 정책·공약을 최 후보에게 인계한다"며 "최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당을 집처럼 생각했지만 가족이 아니라 권력이었으며 불법도 탈법도 범죄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덮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인구 5만도 안되는 지역의 군수 선거에서 수십 번의 밥을 얻어먹고 돈을 받았다는 제보도 있다"며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여론 조작과 왜곡으로 공정선거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담양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기존 3인 경선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담양군수 후보 경선은 오는 5~6일 권리당원 투표(50%)와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50%)를 합산해 이뤄진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방선거 무소속 출마자에 선관위, 7일부터 추천장 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13일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추천장을 교부한다고 4일 밝혔다.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이들은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정식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쓰거나 서명이나 도장을 위조해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등은 법에 위반된다. /연합뉴스

민주 광주시의원 청년경쟁선거구 6~7일 재경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 청년경쟁선거구의 시민공천배심원단 재경선이 오는 6일과 7일 이틀 간 열린다. 4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광주시의원 서구3선거구와 광산4선거구에 대한 재경선을 결정했다.

재경선 방식은 경선 방식과 동일하게 배심원 300명을 모집한 뒤 배심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이틀간 재경선을 한 뒤 결과는 8일 발표한다.

서구 3선거구는 나광엽·이명노·최영환 예비후보가, 광산구 4선거구 김택곤·이귀순·이형철 예비후보가 각각 경쟁한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광주시의원 청년경쟁선거구로 지정된 서구3선거구와 광산4선거구 후보자 선출을 위한 시민공천배심원단 투표를 실시했으나 당규 위반 논란이 벌어졌다.

광주시당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이 투표 당일 배심원단을 추가로 모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일부 예비후보의 반발을 샀으며 재심을 신청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